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배 준 구**

요약: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주요어: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체제, 거버넌스, 지역정책

1. 서론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국가와 지역, 문화의 차이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첨단산업집적지, 신산업지구, 테크노파크, 테크노폴리스, 테크노폴, 혁신 클러스터, 혁신 환경, 학습지구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정부, 금융기관 등 각 주체들이 역동적 협력과 학습에 의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Cooke,

1998: 2-25; 고석찬 83-84).

1980년대 말부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지역혁신체제(RIS)라는 용어를 모든 경우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론적 기초에 바탕을 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지역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용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편화되고 있다(고석찬, 85). 유럽연합은 어떻게 각 지역이 기술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찾아 각 지역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B00206).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 지향적 정책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국민 분열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상황에 달하게 되었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혁신체계에 기반 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역혁신 주체간 협력 유도와 지역의 내생적 발전 및 학습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정책은 선진 외국에서 이미 지역정책의 한 수단으로 널리 적용한 경험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진 외국의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즉, 선진국들은 어떠한 정책으로 혁신지역을 조성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혁신체계상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즉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프랑스의 대표적인 혁신지역 중의 하나인 로렌(Lorraine) 지역을 사례로 혁신주체의 역할과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규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분석 틀을 만들고, 이를 사례지역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인터넷 자료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2005년에 2회(6월, 9월)의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2. 분석 틀

1) 지역혁신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역혁신체제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영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은 한편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추진체제의 변화, 다른 한편으로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개발기구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주도의 정책추진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럽연합 등 초국가적 기구나 조직의 출현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개별 국가 및 지역단위의 파트너간 관계가 변화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Jessop, 1998; Keeble, 1989; Rosenau, 1992 등).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개발기구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분권화와 세계화 등에 따른 행정관리방식의 변화,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추진체제의 변화,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체계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개발기구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지역개발기구와 지방정부, 국가, 초국가 조직 등으로 구성되는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에 초점을 두고 있다(Armstrong and Talor, 2000; Heinelt 1996; Hooghe & Marks 2001 등).

선진 외국의 지역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적 수준이나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미시적 수준의 지역혁신체제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기존의 지역혁신체제와 관련한 공급 지향적 정책(지식의 생산)에서 최근에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을 상호 협동과 경쟁의 메카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Doloreus & Parto). 학자들도 최근에 지역혁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너무 거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행수준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 혁신체제 내에서의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 과정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mits, 2002; Linton, 2002; Lechner & Dowling, 2003). 배준구 외(2006)는 GREMI(1992) 등의 혁신환경론과 Saxanian(1994) 등의 혁신지역에 대한 연구 및 Cooke(1998) 등의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혁신주체간의 연계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혁신의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지역혁신정책,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사업의 사례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대체로 선진외국의 지역혁신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혁신주체 및 그 주체간의 관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 혁신주체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혁신지역 중의 하나인 로렌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혁신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기업, 혹은 단체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로렌지역을 사례로 하여 이와 같이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규명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권영섭(2004)은 로렌지역에 있는 하나의 테크노폴인 "테크노폴 메츠(Metz 2000)"을 대상으로 개발 및 제도형성 과정과 지역혁신체계를 논하였다. 이 연구는 메츠 테크노폴의 물적 인프라 구축, 클러스터 형성, 지역혁신의 운영체계, 고용 및 개발효과 등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즉 이 연구는 로렌의 주요 지역혁신사업인 지역기술계획(RTP) 사업과 낭시(Nancy-Brabois) 테크노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다양한 혁신주체들(유럽연합, 중

양정부, 지방공공단체, 대학과 연구소, 민간단체 등)의 역할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2) 분석 틀

본 연구는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여러 지역의 혁신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를 분석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지역혁신 정책상의 거버넌스는 혁신주체와 그들간의 관계로 규정된다. 기존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혁신지역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혁신주체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 정부는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기업은 주로 생산기능을 담당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한편, 법률, 경영, 세무 전문회사, 즉 용역회사들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기업가 협회나 단체는 다양한 혁신주체간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종 혁신주체들은 <그림 1>과 같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 기술, 인력, 정보, 상품 등을 상호 교환하는 강하거나 약한 연계, 혹은 지속적이거나 단속적인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학습효과, 시너지(Synergy) 효과, 파생(Spin-off) 효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효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연구자는 이를 혁신지역에 관한 가설적 모델로 명명하고자 한다. 배준구 외(2006)는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혁신주체간의 연계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배준구 외(2006)의 동태적 모델을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주요 혁신기능을 담당하는 5개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공간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하고, 그 결과로 시너지 효과, 파생 효과, 학습 효과 등이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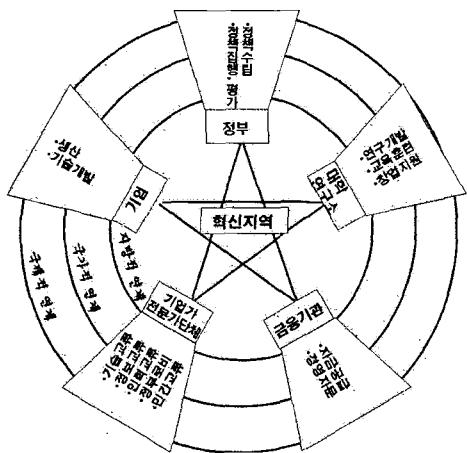


그림 1. 역동적 혁신지역내 혁신주체간
관계에 관한 동태적 모델

자료: 배준구·신동호·최영출·이만형·권병욱, 2006: 13-15에 기초하여 작성

나 역동적인 혁신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프랑스 로렌지역의 지역혁신정책

1)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 이후 산업 및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라 교육 및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1982년 이후에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분산·분권정책이 가속화되었다.

프랑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1960년대 말부터 테크노폴(Technopole) 정책을 추진하여 주요 도시에 테크노폴을 조성하였다. 즉 테크노폴은 1969년에 Sophia Antipolis가 처음으로 조성된 후 Grenoble의 ZIRST, 로렌지역의 Nancy-Brabois 및 Metz 2000, Toulouse 등 40여 개가 설치

되었다. 테크노폴은 1980년대에 전체 테크노폴의 절반 이상이 설치되었다. 지방에 조성된 테크노폴은 파리에서 이전해오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을 집적 시켜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되었다. 지역산업발전의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테크노폴들은 지역혁신체제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중요 개념들이 수용되고 있다.

테크노폴 정책은 1993년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즉 민영화 정책이 채택되면서 연구기관 및 회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테크노폴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관을 만들어 테크노폴을 운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방개발회사(Société de développement local)가 이에 해당한다.

2002년 현재 프랑스 테크노폴협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테크노폴은 7,040개의 기업에 172,500명이 고용(이중에 2001년에 590개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테크노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Sophia Antipolis, Lorraine 지역의 Nancy-Brabois 및 Metz 2000, Midi-Pyrénées 지역의 Toulouse, Rennes, Grenoble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erlin, 210-213, Grondeau, 48-50; DATAR, 1990).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형태의 지역혁신정책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이론 개발의 관점에서 지역 수준의 구체적인 지역혁신전략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즉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s: RTP) 사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도한 첫째 사업으로 산업침체를 겪고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기술혁신을 지역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94년-1996년에 프랑스 로렌지를 비롯하여 유럽 7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로렌지역의 경우 레지옹(광역지자체)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중앙정부의 개입은 약하였다(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998: 1-2). 지역기술계획 사업은 1996년에 지역혁신전략(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프랑스 Auvergne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996년부터 지역혁신기술이전전략(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RITTS)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었다(policy/innovation).

한편 정부는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개념으로 2004년 9월 14일에 경쟁거점(po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경쟁거점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DATAR, 2005; CIADT 내부자료).

2) 로렌지역의 혁신정책

(1) 로렌지역의 현황

독일과 국경지대인 프랑스의 북동쪽에 위치한 로렌지역은 유럽의 핵심부에 있는 지역들 중의 하나다. 로렌은 보불전쟁 후 독일 땅이 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알자스와 함께 프랑스가 되찾은 땅이며, 미국의 텍사스에 비유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쪽의 석탄 및 철강, 남쪽의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가 매우 침체되었고, 인구 유출이 많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2년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산업의 다양화, 대학발전, 도시 및 환경의 질 제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하여 최근에 크게 변모되어 가지고 있다. 즉 2000년에 외국투자기업의 고용창출 면에서 프랑스 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간에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인원이 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부터 40년 동안에 제조업 부문에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의 중심이 철

강으로부터 자동차, 기계 등으로 전향되었다. 로렌은 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 저렴한 곳에 대규모 공장부지, 즉 “메가 존”을 개발하여 유럽 전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전망 있는 유명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La Découverte, 2004: 157-161; www.adielor.com). 로렌지역은 물류수송, 금속제련업, 목재 및 펄프, 자동차, 플라스틱 제조업 및 화학, 농업 및 식품업, 전자 등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다 (www.adielor.com)

프랑스에는 26개의 지역(레지옹)이 있고, 100개의 도(데파르트망)와 약 37,000개의 코뮌(시읍면)이 있다. 로렌 지역에는 4개의 도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모젤(Moselle) 도(데파르트망)에 지역의 중심도시인 메츠(Metz)와 낭시(Nancy) 코뮌(시)이 속해 있다. 로렌지역의 인구는 2003년 현재 프랑스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231.8만명이며, 메츠는 행정의 중심지로서 지역(레지옹) 및 도(데파르트망)의 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메츠가 12.4만명(도시권 규모로는 32.2만명)이고, 낭시가 10.4만명(도시권 규모로는 33.1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이며 (La Découverte, 161-163), 두 도시는 약 5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로렌은 역사적으로 북유럽과 남유럽이 교차하는 교역의 장소로 물류산업이 발달하였다.

(2) 로렌의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s: RTP) 사업

로렌지역에서 통합된 지역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1984년에 ATTELOR 기술이전네트워크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 대학교, 연구소 및 기업의 연계가 도모되었다. 네트워크의 운영방식은 5년 후인 1989-1994년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로렌 지역의 약 30개 기술이전 행위자들(기술이전센터, 기술센터 등)은 기술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와 수단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의 공동 작업에 동의하였다. 1993년에 로렌 STRIDE 프로그램이 개시됨에 따라 약 19개 사업이 착수되어 중소기

업의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이 마련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94년에 새로운 계획계약(Contrat de plan)의 일환으로 ATTELOR는 1990년부터 제공해 온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ATTELOR는 중소기업에 통합된 기술이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orraine Technologie”라는 새로운 정책을 조정하는 계약을 하였다(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88-189).

1993년에 프랑스의 국가혁신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고, 로렌 광역지자체의 사람들이 실무그룹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혁신을 기업 발전의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기업의 업무 및 기술개발에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당시에 로렌의 지역개발정책은 쇠퇴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로렌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은 지역내 산업육성정책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테크노폴은 이미 낭시와 메츠에서 설립되었으나 제한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ATTELOR 네트워크 작업은 유용하였으나 기술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었다(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8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로렌 광역자치단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s: RTP)” 사업을 1994년에 채택하여 기술혁신을 지역정책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지역기술계획사업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둘으로써 로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즉 지역기술계획사업의 목적은 지역혁신주체들에게 기술이전정책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부차적인 목적은 지역의 합의와 다른 유럽지역과 경험을 교류하는데 있었다.

지역기술계획 사업의 성과는 로렌 지역에 바탕을 둔 대기업(SOLLAC, SMAE, ELF Atochem)이 하청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진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한 점을 들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파견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자체 검사를 위한 내부의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http://www.innovation.regions.org/network/regionalstrat/by_region.cfm).

(3) 테크노폴(낭시, 메츠)

낭시 브라부아(Nancy-Brabois) 테크노폴은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와 그로노블(Grenoble Meylan의 ZIRST)에 이어 3번째로 오래된 첨단산업지대 중에 하나이다. 이 테크노폴은 산업전환으로 아주 힘든 지역에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경제 회생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낭시 테크노폴은 1968년에 낭시 디스트릭트(District Urbain de Nancy) 산하에 있는 코뮌조합이 두 코뮌(Nancy, Vandoeuvre)을 모아서 브라부아 고원의 640헥타르를 개발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고원의 실제 도시화는 대학병원(CHU), 의과대학, 예방의학센터, 국립연구소(INRS, CNRS)가 배치되면서 1970년도 초에 시작 되었다. 1978년에는 토지이용계획 결정(종합관리지역: ZAC)을 거쳐 1980년에 연구센터(CERGU, IFBM)와 회사들(Télésysteme, Alsthom)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첨단산업지대에는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고 대학시설들과 연구소들이 한 구역 안에 통합되도록 하여 균형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낭시 테크노폴협회(Association Nancy-Brabois Innovation: NBI)가 창설되어 테크노폴의 발전 및 활성화를 담당하였다. 낭시 테크노폴은 1984년부터는 업무지대로의 입주와 더불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낭시시의 경제발전담당자(B. Guerrier de Dumast)는 비공식적인 관계인 연구부문과 경제부문간의 관계를 개선할 야망을 갖고 낭시 테크노폴협회 회장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낭시 도시권발전사무소(ADENA)가 신설되고, 지

방경제발전 관계자들이 이 사무소에서 모였으며, 테크노폴 활성화를 위한 수단들(공동투자기금 NB21 등)이 점차적으로 마련되었다. 낭시 테크노폴은 초창기에 연구, 산업, 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괴리된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정치인, 기술전문가, 대학교 구성원들은 낭시 테크노폴을 경제개발의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DATAR, 1990: 40; La Découverte, 2004: 161-164).

낭시 테크노폴은 2004년 현재 약 100개의 연구소, 교육기관(연구원 2,500명, 학생 17,000명)과 함께 경제활동, 주거지역, 각종 여가공간이 500헥타르의 고원에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총 3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15,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R&D 연구, 정보, 전자, 통신관련 기업체가 150여개이며, 고용인원이 12,000명에 달하고 있다(<http://www.nancytechnopole.com>).

메츠 테크노폴(Technopole Metz 2000)은 1983년에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메츠 시가 개발주체가 되어 메츠의 시장이면서 상원의원인 로슈(Jean-Marie Rausch)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시장은 도시내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첨단기술을 바탕로 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 지역은 당시에 농경지였으나 메츠 시가 기존의 공업단지와는 별개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 기술산업단지로 확보한 것이다(DATAR, 1990: 109-110;<http://www.metztechnopole.fr>).

메츠 테크노폴은 2000년에 첨단정보통신분야의 고급 일자리 2,000명 창출을 목표로 하여 “Technopole Metz 2000”으로 명칭을 정하였다. 고용목표가 초기에 달성됨에 따라 2002년에 “Metz Technopole”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다. 메츠 테크노폴은 첨단 전기통신과 정보공학으로 특화시켜 이 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기업으로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테크노폴에 입주한 연구소와 종업원 5명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50%로 소규모이

며,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는 7%에 불과하다. 메츠 테크노폴은 첨단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DATAR) 산하의 산업개발공사(ADEILOR)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투자유치 담당자를 상주시키고 외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츠 테크노폴은 규모는 작지만 자원이 풍부한 로렌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유럽 제1의 성장축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1982년부터 추진된 지방분권 및 분산 정책으로 파리와 외국으로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였다.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의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공간(호수, 충분한 녹지, 골프코스 등)을 조성하였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이와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메츠 테크노폴은 2004년 현재 230개 기업, 4,000여 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메츠 도시권 공동체(CA2M)는 아직 이용 가능한 토지의 다수를 매도한 후 2007년 초반에 실행할 테크노폴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메츠 테크노폴 내부 자료).

4. 로렌지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조

여기서는 본 논문의 분석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주체들, 즉 정부, 기업, 대학과 연구소, 민간 등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러한 혁신주체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로렌지역에서는 여러 혁신주체들이 공식적인 모임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만남의 장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있다. 특히 로렌 외국 투자개발공사(ADIELO)는 기업가, 전문가 및 단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창업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은 중앙정부의 협조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국토 및 지역 발전 기획 단(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DATAR)이 지역혁신을 비롯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혁신을 위하여 1967년에 신설된 국립연구개발청(ANVAR)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 지역혁신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들(경제재정산업부, 청년교육연구부, 내무국토계획부 등)과 위원회(경제사회위원회 등)가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정책 조정(대규모 인프라사업 등), 유럽연합과의 지역정책 조정, 외국자본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은 어떤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홍보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예를 들면 로렌지역에 자동차 공장 설치(1977년), 파리의 교육기관(Supélec)과 연구기관(INRIA)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행한 노력과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획단의 대표는 국토계획 개발부처간 위원회(CIADT)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지역계획을 촉진하고 조정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다. 재정지원은 부분적인 지원을 통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행하여(사업을 촉진하고, 절차나 개혁이 보다 속히 추진되도록)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운영된다(DATAR, 2002; Merlin, 165-168; 배준구, 2004c, 97-107).

국립연구개발청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1967년에 연구부와 경제재정부 산하에 이중 통제를 받는 상공업적 성격을 지닌 영조물 법인(établissements public)으로 설립되었다. 1979년에 혁신을 지원하는 임무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재정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국립연구개발청은 기업가, 창업자, 연구소에

게 혁신사업을 지원 및 수행하도록 2003년에 4086개 사업에 295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분받았다. 국립연구개발청은 주로 혁신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원되는 기업의 95%는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이며, 그 중에서 68%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기업이다. 지난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신설된 기업의 약 84%는 이 개발청의 지원을 받았다(CES Lorraine, 85).

국토계획 개발부처간 위원회는 수상 주재 하에 운영되는 국토계획 및 개발에 관한 정책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관련 장관 전체가 참석한다.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처이고,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2) 지역 차원의 공공부문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테크노폴을 비롯한 지역혁신정책을 주도하며,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기업이나 민간연구소 등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테크노폴 설립 후에 입주하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조정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즉 테크노폴의 관리, 홍보, 기업유치,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행사의 주관 및 회의 주선,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는 레지옹(지역), 데파르트망(도), 코뮌(시) 및 코뮌간협력체가 있다. 레지옹은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획계약(한국의 경우 최근에 도입된 지역발전 투자사업 협약에 해당함)을 비롯하여 지역혁신과 지역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코뮌(시) 및 코뮌간 협력체는 테크노폴의 정책, 관리 등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메츠 테크노폴은 초기 개발 당시에 메츠 시가 토지구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인 역할

을 하였다. 낭시의 경우 낭시도시권 공동체(ADUAN)가 주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한다. 경제, 국제교류, 지구관리, 입주회사 관리 등을 담당한다.

(2) 레지옹 지사(préfet)와 특별지방행정기관

1982년 지방분권 이후 레지옹 지사는 국가대표로서 국토계획 및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와 레지옹간의 중재자로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체결 때에 국가대표로서 협상하고 서명한다. 레지옹 지사(préfet)는 일원화된 특별행정기관을 대표하고, 한국에 비하여 권한 및 재원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위임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청년교육연구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연구기술지역청(DRRT) 등이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과 연계, 협력하고 있다.

(3)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ESR)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e régionale: CESR*)은 경제사회 분야(기업, 전문분야의 대표, 조합대표, 공공기관 및 협회의 대표, 전문가)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관으로서 레지옹의 회의 심의에 앞서 지역혁신정책 및 계획(계획계약 사업 등)과 지역이익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문한다.

(4) 로렌 외국 투자개발공사(ADIELOR, 종전의 APEILO)

로렌 외국 투자개발공사는 로렌지역에 투자할 기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DATAR) 산하에 설치하고 투자유치 담당관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프랑스 국제투자유치기관(AFI)의 로렌지점이기도 하다. 이 공사는 해당 지역에 유용한 기술, 금융 및 재산, 환경, 직원 및 가족의 정착 등에 대한 내용, 전문가 평가, 설계, 정보 제공, 보조금 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추진, 시 소유 건물 임대, 절세 등에 대한 각종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민관 합작투자회사(SEM)

민관 합작투자회사(Société d'Economie Mixte: SEM)는 제3섹터 형태인 민관합작회사로 시와 함께 테크노폴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테크노폴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렌의 경우 SEM은 기업 신설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와 창업자들에게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크노폴의 기업을 유태하는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행정, 부동산, 세금, 법률 문제들을 고려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낭시 테크노폴의 경영 및 관리는 메츠 테크노폴의 SEM과는 달리 자체적인 구조가 없으며 도시권 공동체가 관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기술이전혁신센터(CRITT)

기술이전혁신센터는 기술지원, 훈련, 혁신 창출, 기술이전 연구 등을 수행하며, 학교 및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는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 등으로 자체경영을 하면서 민영화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아직까지 민영화하지 못하고 있고, 적자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로렌지역에는 7개의 기술이전혁신센터(목재산업의 지원, 조언, 연구, 개발센터, 금속합금의 처리, 변형센터 등)를 비롯하여 9개의 기술개발센터(콘크리트산업연구개발센터, 목재가구연구센터 등), 3개의 지원센터(건강분야 기술엔지니어링 등), 그 외 13개의 부속기관 및 활동영역이 있다.

3) 대학교 및 연구소 부문

로렌지역은 3개 종합대학교, 14개의 앤지니어학교, 국립 로렌 폴리테크닉 연구소 등에서 75,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교 및 연구소들은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학교는 기술이전,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국립연구기관들, 즉 국립과학연구원(CNRS), 국립농학연구원(INRA), 국립정보처리자동화연구원(INRIA), 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국립안전연구원(INRS), 국립보건의료연구원(INSERM), 정보처리응용로렌연구소(LORIA) 등이 낭시 도시권에 위치하고 있다. 메츠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는 메츠대학교, 미국 조지아 텍 분교(Georgia Tech Lorraine), Groupe Esidc, 첨단전자분야 공과대학(Supélec) 등이 있다.

4) 기업부문

로렌지역에서는 전통산업의 쇠퇴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들은 혁신을 기업발전의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의 업무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이 바뀌었다. 로렌 지역의 기업은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EMIP란 회사는 5만 유로를 투자하여 디스코텍의 병마개를 따는 기계를 발명하여 상업화하는데 성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OLLAC, SMAE, TOTAL, ATOCHEM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하청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진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중소기업의 품질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파견되었다(<http://www.regions.org/network/regionalstrar/by region.cfm>).

기업들이 소기업 창업에 투자를 하거나 협회를 구성하여 신규기업의 창업, 경영 등을 위해 지원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에 의하여 구성된 기업가 협회(Lorraine Entrepreneur, Superforce Lorraine 등)는 신규기업의 창업,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한 정유회사인 TOT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소기업 창업에 투자하고 있고, 제철업의 SODIE, 석탄광업 분야의 SOFIREN 등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지방자치단체(레지옹)가 개별회사의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5) 민간단체 등

로렌지역에서는 민간단체, 기업가단체 혹은 전문가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기술, 정보,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교류하고 있다. 특히 테크노폴 내에는 생활센터(Centre de vie), 과학기술전망클럽 등이 설치되어 문화 활동, 세미나, 연찬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개최되어 기업가, 전문가 및 단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창업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Promotech는 198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당초에는 대학에서 창출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신생기업의 파생 또는 기술 이전을 주로 담당하는 협회였는데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사(préfet)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의회가 예산의 대부분(80%)을 지원하고 있고, 유럽연합 기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직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약 1백만 유로에 이른다. Promotech는 1년에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 약 100회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하며, 2000년부터는 특히 Incubator Lorraine이란 프로그램을 갖고 새로 시작하고 있다(Promotech 내부자료).

상공회의소는 지방의 기업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 즉 회사의 창업 지원, 세금, 법률, 환경규제,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품질관리 등의 교육, 자문(개인별, 단체별) 등을 한다. 상공회의소는 교육, 훈련 등에 관하여 오랜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설립, 항만관리(낭시와 메츠 공동으로 강유역의 항만 관리), 공항과 물류센터도 운영한다. 메츠 상공회의소에는 약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2,000개의 회사와 20만명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비중(약 1만명 고용)을 차지하고 있다(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la Moselle 내부자료).

Lorraine Entrepreneur는 대기업들에 의하여 구성된 기업가 협회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 동안 신규기업의 창업, 경영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의 석유화학 회사인 TOTAL FINA Elf, 제철업의 SODIE, 석탄광업 분야의 SOFIREN를 비롯하여 SOLLAC, SMAE, ATOCHEM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Synergie는 소기업을 창업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업자들을 발굴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한다. 자금문제, 법적 문제, 장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 Synergie는 연간 약 50개의 회사를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여 창업된 회사가 5년 동안 생존 비율은 80%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전체의 비율 55%에 비하여 매우 높다. Synergie는 컨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하고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다. Synergie는 20년 전에 기업가 협회 형태로 출발하였는데 1989년에 하나의 회사가 되었고, 상공회의소가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기도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특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다른 단체(Promotech 등)와도 협력한다.

5. 시사점

로렌의 지역혁신정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중앙정부, 지역자원의 공공부문, 대학과 연구소부문, 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로렌지역의 지역혁신정책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렌지역의 지역혁신정책에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공공부문은 정책의 수립과 함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협회 등을 조직하도록 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 의하여 지원된 지역기술계획(RTP) 사업은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레지옹은 기술이전협회(ATTELOR) 설치를 주도하였고, 전체 예산의 30%를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였다. 지자체는 유럽연합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분산 정책을 활용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둘째, 지역기술계획(RTP) 사업은 로렌지역의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지역행위자들에게 혁신에 대하여 순전히 기술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부터 보다 총괄적(global)으로 고려하도록 바꾸었다. 이 사업은 로렌지역의 대기업이 하청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진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경제사회위원회 등), 상공회의소, 테크노폴, 연구소, 대학교, 민간컨설턴트, 기업, 사업자 클럽 등을 결합시켰다

(http://www.innovation.regions.org/network/regionalstrategies/by_region.cfm).

셋째, 로렌지역의 혁신정책 추진에서 기업은 고유한 생산활동과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마련, 협회 구성을 통한 신규기업의 창업, 경영 등을 지원하여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로렌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간단체, 기업가 단체, 전문가 단체 등의 역할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Promotech 협회는 대학에서 창출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신생기업의 파생 또는 기업 이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협회였는데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회사의 창업 지원, 세금, 법률, 환경규제,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품질관리 등의 교육과 자문, 대학의 설립, 항만관리, 공항과 물류센터 운영, 기업의 이해와 관련된 정부의 로비활동 등을 수행한다. Synergie는 소기업 창업, 실업자 발굴, 창업을 위한 훈련 지도, 관리자와 신출내기 간의 교류 등을 한다.

다섯째, 로렌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소들은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기술이전,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섯째, 로렌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 민·관 합작 투자회사(SEM), 로렌 외국 투자개발공사(ADIELOR) 등이 각종 컨설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역할은 약한 편이다. 상공회의소는 창업 지원, 세금, 법률, 환경규제, 기술, 혁신 등을 행하고, 민·관 합작투자회사는 행정, 부동산, 세금, 법률 등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컨설팅 기능을 한다. 로렌 투자개발공사는 기술, 금융 및 재산, 환경 등에 대한 내용, 전문가 평가, 보조금 지급 및 연수프로그램 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공사는 로렌지역에 투자할 기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투자유치 담당관을 상주시키며, 프랑스 국제투자 유치기관(AFI)의 로렌지점으로서 국제교류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지역기술 계획사업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공동투자기금(NB21)에 SNVB은행이 참여하였다.

로렌지역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는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림 2>와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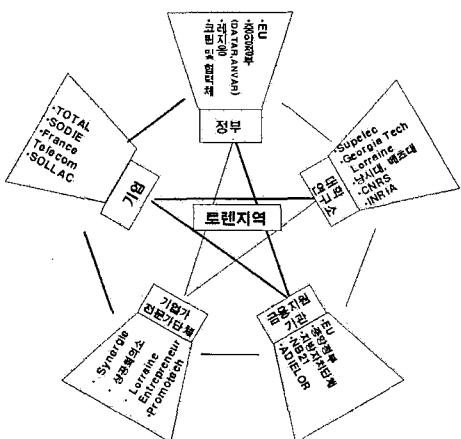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 로렌지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조

로렌지역은 전통 제조업의 몰락으로 인한 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혁신정책의 추진으로 팔목한 만한 산업기반이 형성되고, 첨단기술 제조업 고용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2000년에 외국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 면에서 프랑스 내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경제의 중심이 철강으로부터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바뀌었다(ADIELOR 내부자료). 2002년 11월에 유럽연합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지역에서의 혁신에 대한 조사(Eurostat, 2002)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평균 및 첨단기술 제조업 고용의 경우 1995년~2000년 동안에 7.2%의 성장률로 유럽연합 지역 전체에서 3위를 나타내고 있다(Conseil Economique et Social de Lorraine, 2004: 21-25). 메츠와 낭시의 테크노폴은 호수, 충분한 녹지공간, 골프장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대학의 유치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낭시는 프랑스에서 대학교 밀도에서 5위(주민 100명당 10명의 대학생)를 차지할 정도로 고등교육 인력이 많으며, 외국의 학생과 연구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메츠에는 파리에 있던 첨단전자 분야 공과대학(Supélec)이 이전하였고, 미국의 Georgia Tech 유럽분교가 설치되었다.

2003년 현재 로렌지역의 실업률은 9.4%로 프랑스 전체의 실업률 9.7%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은 프랑스 전체가 21,900유로인데 비하여 로렌지역은 20,300유로로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La Découverte, 66-158). 이와 같은 결과는 로렌지역의 기존 기반산업이 거의 몰락해 가는 가운데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로렌지역은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각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혁신주체간 및 사업간 연계 및 조정도 비교적 잘 수행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지역 차원의 공공부문(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협력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민·관 합작투자회사)과 같이 다층적인 구조 하에서 연계와 협력이 잘 되고 있

는 점은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거버넌스에 시사
점을 주고 있다.

6. 결 론

로렌의 지역혁신사업은 유럽연합, 중앙정부 및 관
련 기관(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 국립연구개발청,
국토계획개발부처간간위원회), 지역차원의 공공부
문(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레지옹경제사
회위원회, 로렌외국투자개발공사, 민·관 합작투자
회사, 지역기술이전센터), 대학과 연구소 부문, 민간
단체(Promotech, 상공회의소, 로렌 Entrepreneur,
Synergie) 등 다양한 혁신주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
다. 정부 부문은 유럽연합, 중앙정부 및 특별지방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협력체) 등의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
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협력이 잘 되고 있다.

로렌지역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럽연합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 및 분산정책을 활용
하고 지원을 받는데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의 지원
및 협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렌지역
의 대기업은 하청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그들의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진하는 네
트워크를 마련하였다. 여러 혁신주체들은 공식적인
모임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만남의 장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
고, 기술과 정보 등을 공유하여 혁신에 기여하였다.
이에 반해 로렌지역은 너무 복잡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고, 관련 기관이 많아 혼란스럽고, 중
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석찬, 2004, 지역혁신이론과 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 권영섭, 2004, “지방분권의 결실: 프랑스 테크노폴 메즈
2000”,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역
음, 파주: 한울아카데미.
- 권오혁, 2004, “혁신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연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역개발학회(주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pp.93~107.
- 김정홍, 2004,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 지역혁신정
책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 박동, 2004, “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사례분석”, 세계의 지
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음.
- 배준구, 2004a,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추진실태와 향후과
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연합학술대회논
문집, 한국지역개발학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109~138
- 배준구, 2004b,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국토
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1), pp.283~305.
- 배준구, 2004c,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지방정부연
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4), pp. 97~107.
- 배준구·신동호·최영출·이만형·권병욱, 2006, “선진국
지역혁신 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 일본의 혁신주체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
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회 9(3), pp.1~30.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사례와 발전
전략, 서울: 정책연구.
- 유럽지역연구회 역음, 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역음, 파
주: 한울아카데미.
- Armstrong, H. and Taylor, J.,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Blackwell Publishers.
- Bastié, J., 1990, “Origine et histoire de la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en France”, Cahiers de C.R.E.P.I.F. 33,
pp. 29-30.
- 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998,
The Evaluation of the Pre-Pilot Actions under Article
10: Innovative Measures Regarding Regional
Technology Plans.
-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de Lorraine, 2004,

- L'innovation en Lorraine.
-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de Lorraine, 2003, *Entreprendre en Lorraine: agir sur les facteurs clés du succès*.
- Cooke, P., 1998, "Introduction: Origins of the Concept," in H. J. Braczyk; P. Cooke; and M. Heidenreich, 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London: UCL Press, pp.2-25.
- Cooke, P., 199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mpetitive Regulation in the New Europe," *Geoforum*, 23(3), pp.365-382.
- Daviet, S., 2002, "Les industriels et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a politique d'aménagement de territoire*. Press Universitaires de Rennes, pp.232-234.
- DATAR, 1990, *Vingt Technopoles: un premier bila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ATAR, 2005, *La Lettre*, No. 183.
- DATAR, 2003, *40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 Doloreux, D. & Parto, S., 2005,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urrent discourse and unresolved issues," *Techonology in Society*. vol. 27. pp. 133-153.
- Fabries-Verfaillie, M., et Stragiotti, P., 2000, *La France des régions*. Bréal.
- Frémy, D. M., 2001, quid 2002, Paris: Editions Robert Laffont.
- GREMI, 1992,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Community's Lagging Regions and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an Approach in terms of Local Milieux and the Innovation Networks*, In Final Report to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ctober, Milan.
- Grondeau A., 2004, "Entre crises et mutations urbaines, quel avenir pour les technopoles?", *Villes en Parallele?*/document 3.
- Heinelt, H., 1996,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Structural Funds." in Heinelt, H. and R. Smith(ed.). *Policy Networks and European Structural Funds*. Aldershot Avebury, pp. 9-25.
- Hooghes, L. and Gary Marks, 2001, "Types of Multi-Level Governance: What? Where? Why?." In paper of Conference, entitled "Multi-Level Governanc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INSEE LORRAINE, 2003, *La Lorraine a son avenir*.
- Jessop, 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0t," *International Sciall Science Journal*. vol. 155, pp.29-46.
- Keeble, David E., 1989, "High-technology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Britain: The case of the Cambridge phenomenon," *Environment and Planning*, pp. 152-172.
- La Découverte, 2004, *L'état des régions françaises*.
- Lechner, C & Dowling, M. 2003, "Firm networks: external relationships as a source for th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entrepreneurial firms," *Enter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5, pp. 1-26.
- Linton, Jonathants, 2002, "Implementation research :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Technovation* 22, pp. 65-77.
- Longhi, Christian, 1999, "Networks, Collective Learn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Innovative High Technology Regions: The Case of Sophia-Antipolis," *Regional Studies* 33(4), pp. 333-342.
- Madiot, Y., et Mestre, R. L., 2001, *Amagement du territoire*, Paris: Armand Colin.
- Merlin Pierre, 2002,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PUF.
- Rosenau, James, 1992, "Governance,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idem and Czempiel(ed.),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pp. 1-29.
-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s, Rudd, 2000, "Innovatio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Questions from a user's perspective," *Technological Forcasting & Social Change*, No.69,

pp. 861-883.

Wackermann, Gabriel, 1992, Les poles technologiques:

une mode ou une nécessit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http://www.coteweb.fr/clubhitech/>

<http://www.cr-lorraine.fr/ces>

http://www.innovation.regions.org/network/regionalstrar/by_region.cfm

<http://www.metztechnopole.fr>

<http://www.sophia-antipolis.org>

<http://www.europa.eu.int>

교신저자(Correspondence): 배준구,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14-79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Tel: 016-722-5229, Fax:051-625-0657,

E-mail:jabae@star.ks.ac.kr

Correspondenc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sung University, 314-79, Daeyeon-dong,

Nam-gu, Busan 608-736, Korea

Tel: 016-722-5229 ,Fax:051-625-0657,

E-mail:jabae@star.ks.ac.kr

최초투고일 2006년 2월 2일

최종접수일 2006년 3월 30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9, No.1, 2006(81~96)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Lorraine Region in France

Jun Gu Bae*

Abstract: The Lorraine region of France is one of the regions in the core of Europe that suffered most from the decline of its traditional industries. Since the 1970s,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solv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riginating from de-industrialization with policies of regional innovation, e.g., establishing technopole, the cre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network, the launch of the RTP project, and business incubators to promote start-ups, technology transfers, and networks between governments, businesses,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Lorraine region, based on an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by a group of researchers, i.e.. Bae et al (2006).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roles of governments are important in creating and implement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Lorraine region; the policies heavily rely on the R&D capacity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have different roles to play.

Keywords: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Lorraine region, Governance, Regional policy, France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sung University